“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처음 들어요”

도로교통법 개정 6개월 광주지역 단속 0건
479곳 설치…경찰, 홍보 강화 후 단속 확대

“우회전이 아닌데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나요? 정말 몰랐습니다.”

올해 7월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 대다수가 이를 외면하면서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8시30분 광주 서구 서광초등학교 교문 앞 횡단보도.

일부 운전자의 경우 교통봉사에 나선 학부모의 수신호에 따라 멈추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다수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행으로 그냥 지나치기를 반복했다.

문제는 상당수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출퇴근 시 이곳을 통행한다는 운전자 김모(43)씨는 “우회전하는 경우에 일시정지 후 지나가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길(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은 서행하며 지나가면 괜찮은 줄 알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8시30분 광주 서구 풍암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출근 시간 탓에 수많은 차량들이 도로에 즐비했지만, 대다수가 이곳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없이 바쁘게 지나갔다.

때문에 많은 행인들이 한참을 기다려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한 행인은 멈추지 않는 차 옆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 등 아찔한 광경까지 목격됐다.

이 광경을 지켜본 주민 이모(45)씨는 “이 동네에 거주하는 운전자들은 여기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조심히 운행한다”며 “하지만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위험한 경우도 있어 이곳 지리가 익숙하지 못한 운전자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성이 감지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15일 오전 광주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안전속도준수, 스쿨존 주정차금지 등 보행권 중심의 교통안전확보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김애리 기자

이어 이씨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며 “많은 사람이 알기 위해서는 더 홍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인근에서 교통봉사에 나선 학부모 곽모(41)씨는 “등하굣길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도 우리 아이들이 통행하는 바람에 항상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등에서 많은 홍보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미흡한 홍보로 운전자들이 개정 내용조차 알지 못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 기준 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체 횡단보도 985개 중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는 479개로 절반에 육박하지만, 개정된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단속 건수는 0건으로 제도 홍보와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단속지침 등에 따라 단속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7조 7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김현지 수습기자

전공노 광산지부, 비노조원 승진 배제 요구 논란

정기인사 앞두고 구청장 면담서 제시…내부 찬반 논쟁 비화
노조 “열심히 일하는 조합원 배려” vs 구 “인사 원칙적 시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 광산구지부가 비노조원의 승진 배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광산구와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전날 면담에서 노조 집행부는 박병규 청장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기인사 관련 요구안을 제시했다.

공무원노조는 비조합원을 ‘노조 무임승차자’라고 지칭하며 내달 2일 시행 예정인 정기인사의 승진 배제를 요구했다.

광산구의 공무원노조 가입률은 약 70%이다.

노조가 내부 게시판에 요구안 내용을 공개하자 수십개의 댓글이 잇따르며 공직사회 내부 찬반 논쟁으로 비화했다.

찬성 측은 “누군 조합비 내고 누군 내지도 않으면서 단체교섭, 복지 이런 혜택은 다 같이 보고 있다” 등 의견으로 노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대 측은 “노조에 실망한 탈퇴 직원에게 변화로 참여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겁박에 의한 방식으로 강요하려 한다”, “승진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다” 등 비판 목소리를 냈다.

노조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는 조합원들을 배려해달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면담에 참석한 광산구 관계자는 “이런 노조의 요구에 대해 정기 인사는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산구는 4급 1명, 5급 3명, 6급 14명, 7급 19명, 8급 28명 등 총 65명의 승진을 시행하는 정기인사를 예고했다.

승진자 명단을 공개하는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는 오는 19일로 예정됐다.

/이옥근 기자

부하직원에 갑질 동부서 간부 ‘강등’ 중징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광주 동부경찰서 부서장급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1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갑질 의혹이 불거진 동부서 A 과장(경정)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인 ‘강등’을 처분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으로 나뉜다.

감찰 조사 결과 A 과장을 둘러싼 갑질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A 과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식사비를 내게 하는 등 부당한 일을 지속해서 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폭언은 물론 과도한 의전을 요구하며 ‘왕처럼 군림했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2014년 비슷한 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복 기자

“특혜 의혹 경로당 폐쇄·보조금 환수해야”

공무원노조, 조례 없는 지원 특권·특혜 지적

공무원노조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로당들의 즉시 폐쇄와 보조금 전액 환수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15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의원과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특권과 특혜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서울시 시우회(퇴직공무원)와 의정회(전·현직 의원)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보조금 지급 규정은 무효라고 판시한 것과 광주시에 지원 조례가 없는 것을 근거로 지자체가 의원과 퇴직공무원 전용 경로당을 지원한 것은 특권이자 특혜라고 꼬집었다.

지역 내 동우회 성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노조는 “행정동우회에 5급 이상의 고위직 관료들이 활동하면서 특정 정당 후보에게 줄을 서거나 공개적인 지지선언을 하는 등 지역 내 정치권력을 독식하는 정당에 기생하는 게 현실”이라며 “심지어 모 회원은 지원금이 줄었다는 이유로 관련 부서에 방문해 항의하는 등 공직자상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일당 독재가 아닌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해 함께 지역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며 “광주시 행정동우회·남구의원 전용 경로당에 대한 특혜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보조금 회수, 사무실 즉시 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광주본부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특권·특혜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퇴직 공무원 모임 단체인 광주시 행정동우회는 2017년부터 서구 치평동 한 경로당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경로당엔 6년 간 예산 1천997만원이 투입된 걸로 알려졌다.

남구도 이달 초 진월동 한 건물에 전·현직 의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경로당을 조성하고 임차 보증금 5천만원과 매달 월세 82만5천원을 지원키로 했다.

/안재영 기자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강진군수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강진원 강진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최근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거구민에게 직접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5일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일행 A씨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흥지청은 애초 A씨가 갑작스럽게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식사 참석자에게 건넸고 사전에 기부행위를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고발인 항고로 재수사를 한 광주고검은 추가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 등을 거친 결과 A씨와 강 군수를 공범 관계라고 보고 기소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강 군수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10일에 열린다.

/장흥=노형록 기자